



· 학문 재생산 제도로서의
국가 박사 제도 ·

그대들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

홍덕구

인문학협동조합/군산대

1. 국가박사제도란?

- ◇ 기초학문 박사학위자에게 **국가가 장기고용 및 안정적인 연구를 보장**하는 제도
- ◇ 기초학문의 박사학위자에게 **5년 이상의 안정적인 연구**를 보장하는 ‘국가박사제’를 실시하고, 인원은 **5,000명 정도에서 시작**하여 현재 인문사회계 시간강사 수 3만 명의 절반인 **1만5천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려야** 한다. 이를 통해 국내 대학들의 대학원도 정상화할 수 있다. 국가박사를 수행하다가 전임교원이 되면 국가박사를 반납하면 된다. 해외박사는 사실상 전임교원이 상대적으로 쉽게 되므로 단기간에 국가박사를 그만둘 가능성이 높다. 따라서 국가박사의 급여는 지나치게 높지 않으면서도 **생활임금** 정도가 되도록 정교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. (박치현, 「대학의 위기와 학술생태계: 대학과 연구(자)의 상생을 위하여」, 법과이론사회학회, <법과사회> 69, 2022, p. 22.)

2. 국가박사제도는 왜 필요한가?

◇ 매년 줄어드는 대학 내 양질의 일자리

◇ 2003년 도입된 '비정년트랙 전임교원' 제도의 확산 : 전임교원 확보율 달성을 위한 꼼수

◇ 2024년 기준 사립대학 152개교 중 107개교에 근무하는 비정년트랙 교원의 평균 연봉 (4,307만 원) 은 정년트랙 교원(8,397만 원)의 절반 수준.

◇ 2018년 개정 강사법 시행 이후 왜곡된 겸임교원 제도

◇ 다른 사업장에서 4대 보험을 해결한 겸임교수를 채용함으로써 비용 절감

◇ 교육부는 대학설립 운영규정을 개정(2024.2.)함으로써 전체 교원 비중 중 기존 1/5에서 1/3까지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함

◇ 학령인구 감소와 학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강사 채용 감소

3. 국가박사제도 시행의 전제로서 인문사회 학술정책기구 모델 검토

- ◆ 김동춘(2018), 「고등사회과학원 설립 필요성과 그 운영방안 모색」, 정신문화연구 41(3).
- ◆ 송승철 외(2018), 「한국 인문학 정책 연구 : 성찰과 대안」, 경제·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연구사업 보고서.
- ◆ 이강재 외(2019), 「학술진흥정책수립체계재정립및중장기 학술진흥방안연구」, 정책연구용역과제최종보고서.
- ◆ 김귀옥 외(2021), 「새로운 인문사회 학술 정책 가버넌스 구축과 과제」,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문정책연구사업 보고서.
- ◆ 박치현(2022), 「대학의 위기와 학술 생태계: 대학과 연구(자)의 상생을 위하여」, 법과이론사회학회, <법과사회> 69.

구분	김동춘(2018)	송승철 외(2018)	이강재 외(2018)	김귀옥 외(2021)	박치현(2022)
기구의 명칭 (가칭)	고등사회과학원	인문융합혁신연구원	학술진흥위원회	인문사회 학술정책연구원	기초인문사회과학원
주요 기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이론·문화연구 -장기 국가정책 연구 -지역연구 -박사과정, 박사 후 과정 운영 -소속 대학원생들에게 전액 장 학금 지급 ·학술연구교수 선발 확대, 지원 액수 상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대학인문학 혁신연구 -사회인문학 진흥연구 -정책혁신 C&D 연구 -미래기술 I&D 연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학술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 -연구 아젠다 발굴과 설정 -학문분류체계 재설정과 관리 -장기 실태 조사 -연구기초데이터 플랫폼 구축 -평가 지표 마련 -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의확장 -국가박사제도 설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학문분야별 10개 연구실 및 5개 센터 운영 -지역별 연구자의 집 설치 -국가학술연구교수제도운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지역당 1,000명 정도의 개인별 연구실 설치 ·연구원 비근무 국가박사 제도도 함께 운영 ·국가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고용주가 되어 연구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제공 ·지역별 연구원과 연구자 임대주택 패키지로 조성
학계 및 대학과의 관계	-박사과정,박사후 과정을운영함 으로써서울상위권대학과일부 지방국립대학의사회과학학과나 연구소가연구 중심대학, 대학원대학이될수있도록압박하 는‘선의의경쟁자’기능수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인문학도(학문후속세대)의 직업 경로에 관한 연구 -인문학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 커리큘럼 혁신방안 연구 -인문기반 학제간 연구의 성공 사례 연구 수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비전임 연구자 중심의 연구 활성화방안 제시 -대학 내 고용과 연구지원 확대 및 연구풍토 변화 -정부의 학술전담 기구를 통한 체계적인 연구자 관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대학의 유휴공간을 국가학술연구교수제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기존 공공기관이나 사립대학건물 공실 활용 ·평균연봉이 3,000만원 중반도 되지 않는 대학들의 비정년트랙 교수 양산을 제어하고 간접적 처우개선 유도

- ◇ 현행 인문사회 학술정책이 **학문재생산**을 지원하지 않으며 오히려 **저해**한다는 공통적 문제의식
 - ◇ 한국연구재단은 인문사회 학술지원 예산의 집행기능만 있을 뿐, 중장기적 정책 수립은 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에서 전담 : **정책수립기구와 집행기구의 이원화**로 인한 문제점 / 수명 규모의 일개과가 일국의 인문사회 학술정책을 총괄해도 관찮은가?
 - ◇ HK, BK 등 **대형사업 위주의 학술연구지원사업** : 긴 호흡의 연구가 불가능하고, 개별 연구자 및 학문후속세대의 연구지속 의지 상실. 선정/미선정 대학간 격차 발생.
- ◇ **커먼즈(common)**로서의 인문사회 학술지식에 대한 고민.
- ◇ 인구절벽 및 고령화 사회 진입 상황에서 **고등교육의 기회**를 시민 전체에게 **평등하게** 부여할 필요성.
- ◇ **연구자, 대학, 정부, 시민**이 함께 참여하는 **새로운 인문사회 학술정책 거버넌스**가 필요함.

4. 국가박사제도 예산은 어디서, 어떻게?

- ◇ 2025년 기준 인문사회분야 R&D 예산은 3,590억원으로 국가 전체 R&D 예산 29조 7천억원의 약 1.21%에 불과함.
- ◇ 이를 최소 1.5배(약 5천억 원) 이상 확보하고, 대형사업의 비중을 줄이면 3~5천 명 규모의 국가 박사제도 운영 가능.
 - ◇ 현행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A, B 제도를 국가박사제도로 통합하여 운영.
 - ◇ 2025년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 예산은 953억7천만원.
- ◇ 기초 인문사회과학원(박치현) 안 : 연구원 근무자 2,000명 * 4천만원 + 연구원 비근무자 3,000명 * 2천만원 = 연간 약 1,400억 원. 간접비 포함해도 연간 약 2천억 원 수준으로 운용 가능하며, 향후 예산 추가 확보 시 선발 인원 확대도 가능.

5. 국가박사제도 도입의 기대효과

- ◇ 인문사회 기초학문의 대학 내 입지가 매년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국가가 연구자들을 직접 고용함으로써 안정적 연구 환경을 제공하고 학문 재생산 효과 제고.
- ◇ 양산되는 대학 내 나쁜 일자리에 대한 경고/견제 효과.
- ◇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공실화되는 지역대학의 유휴 공간을 국가박사제의 연구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학술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시민교육에도 이바지.
- ◇ 파편화된 연구자 네트워크를 복원/재구축하고, 유니온쉽 도입을 통해 연구자 조합 결성 가능
: 당사자 조직으로써 연구환경, 노동환경, 학술제도 등에 대한 공통의 목소리 내기.

살아라

그대는..

그워냐..

감사합니다!

그거다.

